

제6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0. 4. 1.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4월 1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손 병 두 부위원장

이 성 호 위 원

최 훈 위 원

윤 석 헌 위 원

* 의결안건 제103호~제118호 참여

윤 면 식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0년도 제5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6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2020년도 제5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6차 금융위 안전
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차기회의에 보고

-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03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04호 『(주)레이니스트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05호 『스코리인슈어런스아시아퍼시픽 피티이엘티디 한국 지점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06호 『현대해상화재 보험(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07호 『한국카카오 은행(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08호 『두나무(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09호 『피에스엑스(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10호 『(주)과라소프트 및 미래에셋 대우(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11호 『(주)벨소프트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12호 『(주)고위드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제110호 (주)콰라소프트 및 미래에셋대우(주)의 금융서비스 관련임. 모바일로 국내투자자가 해외주식 소수 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인데, 왜 해외주식에만 투자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최근 우리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저널리즘 용어이지만 ‘개미 동학운동’이라고 해서 개인투자자들도 국내 주식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가 국내 주식에도 가능하지는 않은지?
- (보고자)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해외증권사에서 해외주식에 대해서 소수점 단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서비스가 없는 상황임. 국내의 경우 소수점 투자에 대해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있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제103호 신용보증기금 금융서비스 관련임.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됨. 그렇다면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혁신성면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신용보증기금에 허용되었을 경우 민간 쪽에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효과는 없는지?
- (보고자) 우선, 혁신성면에서 외담대나 매출채권보험 같은 유사한 제도는 있지만 현재 상환청구권이 없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혁신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두 번째

로 현재 민간에 이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우선 시범서비스를 제공해보고 이후에 이것을 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민간 쪽으로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위원) 지금까지는 ‘without’이 아니라 ‘with’로 다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렇다고 볼 수 있음.
- (위원) 그런데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다루어야 될 이슈인가 하는 것에 약간의 의구심이 듦. 제도의 변경이나 새로운 제도의 시도를 위한 규제완화 등은 이해가 되지만, IT라든지 혁신 그런 쪽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문드림.
- (위원)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잘 하지 않으려는 것을 취급하는 부분을 혁신성으로 한 것 같음.
- (위원) 제107호 한국카카오은행(주) 금융서비스 관련임. 오프라인의 연구소를 허용해 주려는 것인데 그 오프라인의 연구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될지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고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자칫하면 소비자보호 문제라든지 금융안정 문제와 배치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됨.

○ (보고자) 망분리 규제라는 것이 2011년에 전산금융사고가 크게 나면서 그때 공공부분의 수준에 맞추어 금융분야는 망분리 규제가 강화되어 있음. 전산센터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 그다음에 전산센터 이외의 영업점이나 기술연구소 같은 것을 운영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전산센터에 준하는 물리적 망분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정보통신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리고 이러한 규제 자체가 금융안정차원에서나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중요한 규제인 것은 맞음. 다만,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근무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핀테크들이 개발·연구 등을 강화하면서 오픈 API를 비롯한 오픈 소스방식으로 인터넷망과 직접 연결해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니즈가 시장에 매우 많았음. 그러면 양자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이번에 신청인인 한국카카오은행(주)에서 제시한 방식은 과기정통부에서 지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형식으로 영업점이나 일반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부서와는 분리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혁신과 안정, 소비자보호를 조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임. 망분리 규제 특례는 금융업·전금업 영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해당 금융기술연구소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임.

○ (위원) 연구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 (보고자) 지금 해외에서는 금융기술연구소들이 많이 있음. ‘해외 글로벌 금융회사의 금융기술연구소 사례’가 나와 있는데 PayPal연구소나 씨티그룹연구소의 경우 금융기술만

따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세우고 있음. 기존 금융회사의 금융연구소는 주로 경제·경영연구소 형태거나 금융회사의 일반 IT부서에서 내부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술연구를 병행하는 형식이었다면 해외에서 최근에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PayPal이나 씨티그룹 같은 곳에서 운영되는 연구소 형태를 보면 적극적으로 이런 디지털 전환 추세에 부응해서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데이터분석,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Innovation Lab을 운영하고 있음. 한국카카오은행(주)에서 이번에 제시한 방식이 이와 유사한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특히 오픈 API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롭게 인터넷망과 접속하여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혁신을 좀 더 촉진하는 방향이라고 판단하였음.

- (위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내용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음. 그것이 여러 가지 혁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는 기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위험이라든지, 소비자보호 면에서 약간의 우려는 남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 부대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꼼꼼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리게 되었음.

※ 혁신금융서비스 안전 심의 후 위원장 한 말씀.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년간 총 102건이 지정되었는데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혁신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핀테크·디지털 금융혁신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동시에 지금까지 키워온 금융혁신의 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이것이 동태적 규제혁신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험자본 유치,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 조성, 혁신 금융사업자와의 소통 등 post-코로나19를 준비하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금융혁신을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13호 『(주)안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주)안다자산운용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4호 『멀티에셋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재산상 이익의 제공 관련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한 멀티에셋 자산운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5호 『푸본현대생명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푸본현대생명보험(주)이 외화자산 운용한도를 초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의견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외화자산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 운용하였음.

- (보고자) 30.03%에서 30.09%로 초과 운용했음.

- (위원) 위반은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위반이라고 할 만한 사항인지? 자진신고를 했다면 그렇게 엄하게 기계적으로 해야 될 만한 것이고, 경감사유는 안 되는지?

- (보고자) 위반행위와 위반일수 등을 감안할 때 사소한 부주의 가능성, 자진신고 내용 등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면제 기준상에 있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항으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이것이 동 건의 쟁점사항인데 이런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전에 이 건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으로써 법상 위반이 발견되면 금융위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 면제기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쟁점을 두고 살펴봤음. 첫 번째, 이 건의 행위자는 실질적으로 초과금액이 0.09%로 64억 원으로 미미하고 일수가 4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소한 부주의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은 행위자에 대해 행위자의 과실여부가 행위자의 담당업무상 지위 정도와 그 행위자의 빈도와 정도, 행위자의 의도 등 당해 한도 초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이 건 행위자는 푸본현대생명(주) 투자관리팀에서 외화자산 거래 시마다 법상한도 설정을 하고 그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임. 그런데 이 건 위반행위가 6월27일, 28일 발생했지만 외국환매입 등 외화자산 투자는 거의 매일 발생하고, 법상 30%이기 때문에 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평균 14%내외에서 완충영역을 두고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법상한도에도 불구하고 완충여력 없이 28% 이상으로 관리해 왔음. 그리고 특정일에는 29.95%까지 한도가 차서 관리했음. 그렇다면 이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는 0.05%만 초과해도 법상 위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주의의무가 상당히 있었던 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자산 운용한도 초과가 발생한 것은

사소한 부주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또 하나는 이건 위반행위가 6월27일, 28일에 발생하였지만, 사실은 6월초부터 법정한도에 근접하게 외화자산을 운영하고, 그 거래가 계속 증가하였음. 그러다가 6월27일, 28일 양일간 거래로 30% 초과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소한 부주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음.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의 경우는 자진신고를 했음. 그리고 또 저희가 인지하게 되고 자진치유가 됐음. 그래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각각 30%씩 경감을 했음. 경감기준에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4,000만 원에서 50%를 경감해서 2,000만 원을 부과한 건임.

- (위원) 알겠음. 30%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잘못도 있음. 우리가 외화자산운용한도 30%를 초과하는 법을 내놓았는데 통과를 못 시켰음. 더 열심히 해서 법을 통과시키고, 대개 다 완충을 하는데 빠듯하게 했다는 것을 보면 조금 부주의했다고 볼 수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116호 『자베즈제이호 유한회사에 대한 엠지손해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경영개선명령상태인 엠지손해보험(주)의 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

- (위원) 엠지손해보험(주)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부터 명령까지 여러 번 안건이 상정되었고, 각각의 명령안에 대해서도 조치가 부과되었지만 여러 번 계획불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대주주 변경이 이루어져서 자본확충도 이루어지면 적기시정조치에 대해 중지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대주주 변경 승인만 난 것이고,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계획 승인이 작년 9월18일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면 기존에 발령되었던 적기시정조치들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엠지손해보험(주)는 최초에 2018년 5월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부과 받았고, 그다음에 경영개선요구 그리고 작년 6월에 경영개선명령을 조치 부과 받고 이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는데 작년 9월에 조건부 승인이 난 것임. 그 조건부승인의 내용은 11월30일까지 경영개선계획에 따른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조건이었음. 다만, 대주주 변경 승인의 절차 진행으로 11월말까지 유상증자가 곤란할 경우에는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승인이 나면 보름 안에 유상증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임. 그 외 경영개선계획 내용으로 후순위채권 발행과 경영진 교체 부분이 있음. 총 980억원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예정인데 신규발행이 300억원이고, 기존 후순위채 상환이 680억원 정도임. 임원진 교체는 대주주 변경 승인 이후에 교체할 예정이

라고 제출했는데 어제일자로 엠지손해보험(주)가 기존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임원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경영개선계획으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 유상증자를 완료하고 추가로 후순위채권 발행만 하면 일단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이행한 것으로 보임.

- (위원) 그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보면 금융위의 별도 조치는 필요 없는지?
- (보고자) 금감원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결과 등을 보고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에서 적기시정조치 종료를 의결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7호 『에이원자산대부관리(유)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에이원자산대부관리(유) 유한회사가 채권추심비용을 실제로 다 과다하게 청구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초과 징수한 것이 7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벌금이 1억 원이니까 재발방지를 위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는데 비례할 수는 없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은 없는지?

- (보고자)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건별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건별부과를 기본으로 한 것임. 원래 과태료 부과 금액이 4억 1,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비례의 원칙을 고려해서 법정 최고한도인 1,000만 원의 열배인 1억 원을 초과한 금액인 3억 1,000만 원을 감경해서 1억 원을 부과한 것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8호 『SK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IT핀테크전략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SK증권(주)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신용정보법상에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될 의무조항이 있으며, 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임. 그런데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것과 하위 규정에서 규정된 것들이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금융위에서 과태료 처분 같은 침익적 처분들을 하위규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음. 그 부분은 필요시 법률이나 시행령 등 상위 법령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보고자)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하위 규정에 과도하게 위임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9호 『금융감독원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이성호 상임위원과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금융위원회 제6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05분 폐회)